



전국 > 전북

전북 남원시에 국립의전원 설립되나...법률안 복지위 통과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2023-12-20 14:12 송고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및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의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날 복지위는 재석 의원 20명 중 민주당 의원 13명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포함한 14명 찬성,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공공의대 법안을 원안 통과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을 비롯해 여당 소속 의원들이 법안 강행에 반대했으나 야당은 표결을 진행하며 법안을 통과 시켰다.

김성주 의원은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며 "의사의 서울 집중, 성형 피부과 쏠림,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의전원은 전북도가 남원시 소재한 서남대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서남대가 폐교됐으나 의대 정원 49명을 현재까지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와 여당의 반대로 그동안 추진되지 못했다.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립공공의대설립법' 보건복지위 통과...의료 불균형 해소 발판

등록 2023.12.20 13:25:08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평가 긴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9.06. 20hwan@newsis.com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이른바 국립의원법으로 불리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의사제'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복지위는 재석 의원 20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포함한 14명 찬성,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공공의대 법안을 원안 통과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을 비롯해 여당 소속 의원들이 법안 강행에 반대했지만, 야당은 표결을 진행하며 법안 통과로 이어졌다.

김성주 의원은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라며 "의사의 서울 집중, 성형 피부과 쏠림,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서 우수한 의사인력을 양성해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새벽 상경 진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법안...오늘 국회 복지위 통과

입력 2023-12-20 15:53:22

전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이 오늘(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회 복지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0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13명과 정의당 1명 등 14명 찬성에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공공의대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옛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 국립의전원을 세운 뒤, 이 곳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할 공공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의사의 서울 집중, 성형, 피부과의 쏠림,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고 복지부에서도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박웅 기자 ism@kbs.co.kr
박웅 기자의 기사 모음

저작권자유(KBS뉴스(<http://news.kb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공공의대설립법' 보건복지위 통과..."의료 불균형 해소 발판"

2023-12-20 13:31 전북CBS 남승현 기자 |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연합뉴스

'남원 국립의전원법'으로 불리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의사제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복지위는 재석 의원 20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포함한 14명 찬성,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공공의대 법안을 원안 통과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을 비롯해 여당 소속 의원들이 법안 강행에 반대했지만, 야당은 표결을 진행하며 법안 통과로 이어졌다.

김성주 의원은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라며 "의사의 서울 집중, 성형 피부과 쏠림,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서 우수한 의사인력을 양성해야 응급실 뱅뱅이, 소아과 오픈런, 새벽 상경 진료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주소: <https://www.nocutnews.co.kr/6066370>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全北日報

남원 공공의대법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7부능선 넘어

윤김윤정 | ① 입력 2023-12-20 18:50 | ① 수정 2023-12-20 18:50

소위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 직권상정

김성주 의원 "정부·여당도 본회의 통과 동참해야" 호소

경실련 "여당 거부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 요구



민주당 전주병지역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 공공의대법 통과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사진=김윤정 기자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공회전을 반복했던 남원 공공의대법(국립 공공의대법)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남원 공공의대법은 이날 복지위 재석 의원 20명 중 민주당 의원 13명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포함한 14명 찬성,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 의결됐다.

앞서 법안발의자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지역의사제에 더해 공공의대법에 대한 추가 심사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 법을 처리했다. 김 의원의 전략대로 이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단계를 건너뛴 채 복지위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돼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여야 합의 대신 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과정은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실제로 해당 법안은 당초 이날 전체회의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의 신동근 위원장이 같은 당 소속 의원의 추가 심사 요구를 받은 뒤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추진 당시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와 실효성 등 사회적 논란으로 논의가 중단됐다"며 "이런 쟁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추가 논의도 없이 의결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유감"이라고 반대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지난 2018년 폐교된 전북 남원시의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체화 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당정 협의에서 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됐었으나 의사단체와 보수정당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됐다. 전북지역 언론과 정치권에서 해당 법안을 '남원 공공의대전원법'으로 지칭한 것도 의사정원이 필요한 다른 지역 공공의대법과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함이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 공공의대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의사의 서울 집중, 성형·피부과 쏠림, 지역의로 불균형을 해소할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국립의전원법 복지위 통과를 환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여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

청년의사

HOME > 뉴스 > 기관·단체

민주당 “공공의대법 본회의까지”...패스트트랙 요구도

청년의사

* 송수연 기자 | © 승인 2023.12.20 16:00

김성주 의원 “정부·여당도 본회의 통과 동참해달라”
경실련 “여당 거부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라”



국립의원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통과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진 제공 : 김성주 의원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바로 상정해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살리기TF 단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국립의전원법인 ‘국립공공보건 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020년 6월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국립의전원법에 대한 추가 심사를 요구해 처리했다. 이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단계를 건너뛴 채 복지위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돼 의결됐다. 민주당은 국립의전원을 서남의대가 있던 전북 남원 지역에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의사의 서울 집중, 성형·피부와 쏠림,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국립의전원법 복지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해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새벽 상경 진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국립의전원은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와 함께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국립의전원법과 지역의사제법을 통과시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길에 정부·여당도 동참해 달라”며 “민주당은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도 “공공의대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반겼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여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국가가 나서서 지역의료 불균형과 필수과 의료인력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작 처리됐어야 할 법안이었다”며 “만일 여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처리를 지연시킬 경우 복지위는 지체 없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완수하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회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연내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회 늪에 빠져 생을 마감한 법안이 수도룩하다. 여당과 법사위도 의미 없는 입법 지연을 그만 두고 국민의 생명권 보장에 적극 협조하라”고 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